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궤노현)입니다. 저희 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구성된 후 지난 5개월 동안 연구와 경기도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내부 학습과 논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결실을 모아 지난 12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향후 각계 전문가 의견 조회, 각계 공청회 등을 거쳐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확정짓고 1월말 경기도교육청에 최종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저희 자문위원회는 내실 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하여 인권·교육·법 전문가 열다섯 분에게 지난 17일 발표된 '자문위원회 초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조회지>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붙임자료(첨부파일)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초안 발표회 자료집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관한 10문 10답(자문위원회 작성)
3. 초안 발표 후 주요 언론 사설·칼럼 모음

- 작성하신 의견서는 2010년 1월 5일(수)까지 배경내 자문위원 메일(hregang@hanmail.net)로 회신해주십시오.

- 소정의 자문료(20만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름 △소속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6가지 개인정보를 같은 메일(hregang@hanmail.net)이나 문자(017-214-3550)로 24일(목) 낮 12시까지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 문의 : 배경내 자문위원(017-214-3550)

☞ 계속

[의견 조화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소속 :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

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